

저신뢰 사회를 만드는 고신뢰 기대? 가족확장성과 신뢰기준의 역할*

허 용 회 박 선 응 허 태 균[†]
고려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저신뢰 평가에 기여하는 문화심리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저신뢰 평가가 한국인 스스로 높은 신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귀인될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신뢰 판단의 기준을 형성하는 데 한국의 문화심리적 특성인 가족확장성(Korean Family Expansionism)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540명의 한국 성인에게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의 기준 및 실제 신뢰 정도와 그들의 가족확장성을 측정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였고, 연구 2에서는 가족확장성을 활성화시키는 처치가 신뢰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은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보다 더 높았고, 특히 관계(친밀성)요인이 아닌 대상(책임성)요인에서 정치와 사법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이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다소 비현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에 대한 신뢰기준에 비해 정치인이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실제 그들에 대한 신뢰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수준/기준(부모 대비)은 가족확장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부모에 비해 사법부/정치인에 대한 더 높은 신뢰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불신 또한 높았다. 또한 연구 2에서는 가족확장성을 활성화시켰을 때 신뢰의 기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한국사회가 저신뢰 사회라는 전제 하에 그 원인을 밝히려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저신뢰 사회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이유와 그 속에서 가족확장성이라는 문화심리적 요인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규명하여 한국 사회의 신뢰 현상의 심층적 의미를 논하였다.

주요어 : 신뢰, 저신뢰 사회, 가족확장성, 정치 신뢰, 사법부 신뢰, 부모 신뢰

* 본 연구는 2015년도 유진그룹의 '한국사회의 신뢰 구축'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 02-3290-2862, E-mail : tkhur@korea.ac.kr

신뢰는 인간관계 구축과 협력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특히 정부와 같은 사회적 체계에 대한 신뢰는 사회와 개인 간 협조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신뢰는 공공 분야뿐 아니라 시장 경제 및 기타 민간 교류 분야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가 발간한 보고서 <Government at a Glance 2015>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대해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은 약 34% (2014년도 기준), 그리고 한국의 사법 제도에 대해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27% (2013년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의 무법 천지에 가까운 콜롬비아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또한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 WVS)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의 신뢰가 매우 낮으며, 특히 정부, 기업, 국회, 군대, 사법부 등과 같은 사회 공적 체제에 대한 신뢰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10-2012년에 걸친 WV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한국인의 25.5%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26.5%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이러한 조사들에 근거해서 한국사회는 일반적으로 저(低)신뢰 사회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국사회를 총체적인 저신뢰 사회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 평가는 각 국가들의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근거하고 있기에 절대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 저신뢰 사회가 맞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 진정 저신뢰 사회였고 지금도 저신뢰 사회라면, 지난 반세기의 눈부신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했을지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도 한국사회의 일상에서는 암묵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비계약적이고 비법률적인 관행들이 만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나 약관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보다는 구두 약속이나 모호한 무한책임을 근거로 한 업무처리가 흔하다. 이러한 일상의 행위들은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일어나기 힘든 것들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저신뢰 평가는 실제 한국사회에서의 신뢰의 부재와 더불어, 주관적인 인식의 왜곡에 최소한 일부 귀인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문화 역사적으로 유교적인 가치를 근간으로 한 국가와 사회체계를 운영해왔기에 국가, 사회, 기업을 하나의 큰 가족과 같은 집단으로 인식하는 가족확장성(Korean Family Expansionism)을 심리적 특성으로 발전시켜왔다. 이에 따라 한국 사람들은 정부, 회사 등 사회적 체계들을 가족의 속성으로 인식하고, 그런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사회적 체계에 가족과 같은 높은 신뢰를 요구하고 있을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오히려 거대한 가족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싶은 한국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정부, 사회, 기업과 같은 사회적 조직은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신뢰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그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뢰의 기준과 실제 신뢰 수준의 간의 관계, 그리고 가족확장성이라는 문화심리

적 요인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신뢰의 개념

심리학에서의 신뢰라는 개념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정의들이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어, 신뢰란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대상이 가진 동기, 의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지각된 취약성 혹은 위험성으로 규정된다(Kramer, 1999; Lewis & Weigert, 1985; Robinson, 1996).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형성되는 신뢰뿐 아니라, 집단이나 사회 제도, 조직 등에 대해 형성되는, 보다 일반적인 태도나 기대로서의 신뢰 개념을 다루기도 하였다(박진영, 최혜원, 서은국, 2012; Barber, 1983; Luhmann, 1988). 한편 인지적 차원뿐 아니라 정서적, 행동적 차원이 결합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신뢰 개념을 정립하려는 시도 또한 존재하며(김명인, 이영석, 2000; Whitener, Brodt, Korsgaard, & Werner, 1998), 일부 연구자들은 문화권에 따라 신뢰 개념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 신뢰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강조하기도 하였다(박영신, 김의철, 2005; 최상진, 김의철, 김기범, 2003; 한성열, 2005).

신뢰가 형성되는 대상은 특정 개인에서부터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특히 국가나 기업, 교육기관, 정책, 사회 제도 등 사람이 아닌 대상들 또한 신뢰 혹은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순화(2013)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제품 재구매, 긍정적 입소문 등 경제적, 사회적 충성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손정락(2005)은 신뢰가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 밖에도 기

존 연구자들은 군대(이전희, 문형구, 김정민, 2011), 기업(탁진국, 손동성, 2012), 언론(최영재, 2006), 교육(유길한, 2008) 등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신뢰 관련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국가나 정치, 사회 제도 등 현대 사회의 유지 및 발전의 근간이 되는 대상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인식을 다룬 연구들 또한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김재신(2011)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또한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정치에 대한 신뢰 인식 상에서의 차이를 살핀 한 연구에서는 부모보다 청소년들이 정치인, 공공기관, 공무원에 대해 더 낮은 신뢰를 갖고 있었음을 밝혔다(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3).

특히 정부나 정치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신뢰는, 각종 정책들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무척이나 중요하다(Chanley, 2002; Hetherington, 1999).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 수준은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령 정부에 대한 신뢰는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Yamagishi & Yamagishi, 1994), 사회 구성원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Rotter, 1980).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는 필수적이다(김재신, 2011; Brown & Ashman, 1996; Putnam, 1993). 예를 들어, 이나경과 이영애(2005)는 혐오 시설로 분류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입지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한 바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정부 혹은 원자

력 관련 전문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저신뢰 인식

한국 사회는 일반적으로 ‘저(低)신뢰사회’로 평가된다. 2011년 OECD에서 발간된 보고서인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2011>에 따르면 일반적인 타인들에 대한 신뢰 수준 조사 결과, 한국은 조사대상국 36개국 중 2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였다. 사법부, 정부, 그리고 언론에 대한 신뢰 수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국 40개국 가운데 각각 34위, 31위, 38위를 기록하였다. OECD에서 발간된 또 다른 보고서 <Government at a Glance 2013>에서는 한국인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불과 25%에 불과했는데, 이는 조사대상국 34개국 가운데 29위에 해당하는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활용한 문항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 문항으로 묻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매년 기업, 언론, 정부,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의 주요 기관,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하는데 해당 조사 역시 단일 문항을 활용, 단지 각 대상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리커트 3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효율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그 신뢰성과 타당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아직 신뢰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합의된 학술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정교한 척도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에, 기존 신뢰에 관한 조사결과는 학술적 엄격성에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신뢰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저마다 다양하고 동시에 다소 모호한 신뢰 측정 도구를 사용해 왔으므로 연구 결과들 간 체계적인 비교 검증 또한 어렵다(조기숙, 박혜윤, 2004).

신뢰 개념이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다르게 형성되고, 규정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박영신, 김의철, 2005; 이상미, 김의철, 박영신, 2006; Cook, Yamagishi, Cheshire, Cooper, Matsuda, & Mashima, 2005; Kuwabara, Willer, Macy, Mashima, Terai, & Yamagishi, 2007; Yuki, Maddux, Brewer, & Takemura, 2005) 또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저신뢰 평가에 대한 타당성에 비판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최상진 등(2013)은 한국에서의 신뢰 개념과 서구에서의 신뢰 개념을 비교, 양자 간의 근본적인 차이에 관해 지적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과의 특수한 관계들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는 데 반해, 서구에서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일반적인 대인 관계나 공적인 관계 내에서도 신뢰가 폭넓게 형성되고, 규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또한 한국 사람들은 상호 간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신뢰가 자동적으로 획득되는 것으로 여기지만, 서구에서는 상대방이 지닌 속성이나 행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증이 완료되고, 상대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수반되어야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한성열(2005)은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란 가족을 기반으로 하여 1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가족을 넘어선 다른 일반적인 대상들에 대한 신뢰 역시 가족을 향한 한국 사

람들의 신뢰를 고려하는 가운데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Kim(2003) 역시 한국 사람들은 타인의 속성에 근거하여, 타인과의 신뢰를 구성한다기보다는 타인과 나 사이에 맺어진 관계 그 자체로부터 신뢰감을 느낀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부나 기업 등에 대한 신뢰는 해당 기관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지각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더해, 신뢰에 대한 기존 조사들은 참조 집단 효과(Reference Group Effect)라는 비교 문화조사에서의 중요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Heine, Lehman, Peng와 Greenholtz(2002)는 주관적인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비교문화 연구를 진행할 경우, 참조 집단 효과가 발생하여 연구 결과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태도, 가치관 등에 대한 자기보고식 문항들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각각 참조 집단으로 삼는다(Peng, Nisbett, & Wong, 1997). 예를 들어, 한국인은 한국인들을 참조 집단으로 삼아 자신의 태도, 가치관의 상대적 크기를 추정하며, 미국인은 자신이 속한 미국 사회의 구성원들을 참고 집단으로 삼게 된다. 결과적으로 비교문화 연구에서 각 문화권 실험 참여자들의 참조 집단이 서로 상이하다면, 측정된 리커트 척도 점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왜냐하면 참조 집단, 즉 측정치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기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에 대한 국제 통계 조사 결과들 역시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부재한 채,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리커트 응답 값만을 단순 비교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므로 한국인들의 신뢰

인식이 다른 국가들에서 보고된 신뢰 인식보다 더 떨어진다고 단순히 판단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인식 조사로 나타난 사회적 진단은 그 결과해석에 유의하여야 하며, 그 인식형성에서 사용된 참조 집단 또는 비교기준을 조사하는 학술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족확장성

한국 사회는 중국, 일본 등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유교 문화권으로 구분된다(정태연, 2010; 한덕웅, 2001). 과거 조선 시대에 중국에서 성리학이 전파된 후, 성리학은 조선의 국정 운영을 위한 이념적 틀로 자리잡았다. 과거 시험을 통해 우수한 유생(儒生)들이 다수 국가 주요직에 지속적으로 진출하였으며, 유교를 숭배하고 불교 등 타 종교를 배척하는 등 이른바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이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시행된 것은 당시 조선이 얼마나 ‘유교 사회’의 모습에 충실했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예다.

특히 유교에서는 삼강오륜(三綱五倫) 등을 통해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친구, 부부 간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도덕을 강조하는데, 이들 관계 내에서의 질서가 바로 서야 곧 이상적인 사회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유교 경전 가운데 하나인 <대학(大學)>에 등장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구절은 자기 자신 및 가족 간의 질서 확립이 궁극적으로 국가 및 세상의 안정과 연결된다하여, 곧 가족 관계가 기타 모든 관계들의 기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약 500여 년 간, 유교가 사회를 지

탕하는 근간 이념으로 자리잡으면서 자연스럽 게 한국에는 각종 유교적 전통들이 일반 서민 들의 일상에까지 뿌리 깊게 자리잡게 되었고, 그 여파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심경섭, 이누미야 요시유키, 윤상연, 서신 화, 장양, 한성열, 2012; 이장주, 최상진, 2003; 조궁호, 2007).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근거하여, Benavides, Lee, Kim, Adeclas와 Hur (2016)는 기존 가족주의(Familism; Steidel & Contreras, 2003)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한국인들만의 특수한 가족 관계에 대한 역동이 존재함을 주장하면서 가족확장성(Korean Family Expansionism)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가족확장성이란 지역사회, 기업, 정부, 언론 등 거시적인 사회 체계들을 곧 가족 체계로 이해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가족 확장성이 높은 이들은 사회 내 조직들의 형태가 운영 방식이 곧 가족의 형태 및 운영 방식과 유사해야 한다고 여긴다. 또한 기업가-종업 원, 대통령-국민 등의 관계를 곧 부모와 자식 의 관계로 이해하고자 하며, 따라서 기업가나 대통령 등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아 랫사람을 돌보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족확장성의 개념 을 근거로, 한국 사회 ‘저신뢰’ 현상의 원인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만약 한국 인들이 정부, 기업, 사법부 등 사회 체계들을 가족의 형태로 이해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면, 가족에 대한, 비교적 높은 신뢰의 기준들 을 사회 체계들에도 적용하고 있으리라 보았 으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회 체계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신과 관련이 있으리라 예상하였 다.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가족확장성의 개념을 토대 로, 한국 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신뢰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 는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 및 실제 신뢰 수준을 측정한 뒤, 각 대상에 대한 신뢰 기준들을 비교하였으며 신뢰 기준 들과 각 대상에 대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신 뢰 수준 간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신뢰의 기준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사전에 진행하였다. 예비 조사의 참여자들은 신뢰하는 대상을 묻는 문 항과, 대상을 신뢰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각각 주관식으로 응답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수집된 응답들을 유사한 것끼리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결과적으로 신뢰 기준을 측정하기 위한 총 12개의 문항들을 선별하였다. 마지막 으로 신뢰 기준들 간의 비교 및 신뢰 기준과 신뢰 수준 간 관련성을 확인한 뒤, 이들 신뢰 기준과 신뢰 수준이 각각 가족확장성과 어떠 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족확 장성 수준이 높을수록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 한 상대적 신뢰 기준(부모 대비)은 높을 것이 며, 상대적 신뢰 수준(부모 대비)는 낮으리라 는 것이 본 연구의 가설이었다.

연구 1은 신뢰기준, 신뢰수준과 가족확장성 의 관련성을 보여주겠지만, 그 인과관계를 확 인하기 위해 연구 2를 수행하였다. 연구 2에 서는 가족확장성이 정부-국민 간 신뢰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검증해 보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모든 실험 참여자들을 무작위로 두 집단(가족 확장성 수준이 높도록 유도된 집단 대 가족확

장성 수준이 낮도록 유도된 집단)에 배정하여 처치한 후에, 정부-부모 간 신뢰 기준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부모에 대한 신뢰기준 대비, 가족확장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 기준이 낮을 것이나, 가족확장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 기준이 높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연구 1

연구참여자

전국의 성인 남녀 540명(남성 = 270명, 여성 = 270명)을 대상으로 조사회사를 통하여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응답을 마친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적립금이 지급되었다. 실험 참여자들의 나이 평균은 38.08세($SD = 10.02$)였으며, 범위는 20세에서 59세였다.

연구 절차

참여자들은 우선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을 각각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는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을 대상으로 각각 만들어진, 신뢰 기준을 묻는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지는 ‘자녀-부모 간 신뢰의 기준(12문항)’, ‘사법부-국민 간 신뢰의 기준(12문항)’, ‘정치인-국민 간 신뢰의 기준(12문항)’, ‘가족확장성(6문항)’, ‘인적사항(성별, 나이 등)’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들에 응답을 마친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받

았다.

연구 도구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의 수준

참여자들은 부모(“귀하는 귀하의 부모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사법부(“귀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및 정치인(“귀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을 실제로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는 문항들에 관해 7점 척도(1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신뢰한다) 상에서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상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의 기준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전 조사를 통해 한국인들이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해 ‘신뢰한다’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들을 규명하여 신뢰기준 측정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조사 이전에 별도로 4년제 대학생 75명(남성 = 33명, 여성 = 4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체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23.13세였으며($SD = 2.92$), 나이의 범위는 19세에서 35세였다. 사전 조사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설문지를 통해 가장 신뢰하는 대상(“귀하가 가장 신뢰하는 대상을 한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대상을 신뢰하는 이유(“대상을 가장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해 적어보도록 지시를 받았다. 이 때 가장 신뢰하는 대상은 단답형으로, 해당 대상을 신뢰하는 이유는 서술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모든 응답을 마친 참여자들에게는 실험의 목

적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수집된 응답 내용들은 먼저 연구자 각각에 의해, 유사한 내용별로 분류되었다. 이후 연구자 간 분류 결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대상에 대한 신뢰의 기준’으로 12개의 문항(‘매우 잘 알아야 한다’, ‘속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함께 한 시간이 길어야 한다’, ‘상호 간 교류 경험이 많아야 한다’, ‘그 어떠한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지지해야 한다’, ‘진실되고 성실해야 한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배신하지 않아야 한다’, ‘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어야 한다’)을 도출해내었다. 이 문항들은 내용적으로 크게 친밀성과 상호성에 초점을 맞춘 관계적 요인과 도덕성과 책임성에 초점을 맞춘 대상적 요인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연구 1에서의 참여자들은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 각각을 신뢰하기 위해 상기 12개의 기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다(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중요하다). 한편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의 기준 문항들의 신뢰 계수는 각각 .90, .91, 그리고 .91에 각각 해당하였다.

이에 더해 신뢰 기준에 대한 전체 12개의 문항은 ‘관계 요인(‘매우 잘 알아야 한다’, ‘속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함께 한 시간이 길어야 한다’, ‘상호 간 교류 경험이 많아야 한다’, ‘그 어떠한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지지해야 한다’)과 ‘대

상 요인(‘진실되고 성실해야 한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배신하지 않아야 한다’, ‘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어야 한다’)이라는 두 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부모-신뢰 기준(관계 요인; Cronbach's alpha = .85)’, ‘부모-신뢰 기준(대상 요인; Cronbach's alpha = .84)’, ‘사법부-신뢰 기준(관계 요인; Cronbach's alpha = .89)’, ‘사법부-신뢰 기준(대상 요인; Cronbach's alpha = .86)’, ‘정치인-신뢰 기준(관계 요인; Cronbach's alpha = .87)’, ‘정치인-신뢰 기준(대상 요인; Cronbach's alpha = .88)’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생성하였다.

가족확장성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여자들의 가족확장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가족확장성 척도(Benavides, Lee, Kim, Adeclas, & Hur, 2016)를 활용하였다. 가족확장성 척도는 총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들은 각각 3개의 하위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확장성 척도는 사회 집단들을 가족의 범주로 받아들이려는 성향(Familial views of societies; “가장 이상적인 사회 조직(동호회, 회사 등)의 형태는 가족의 형태와 유사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과 가족을 운영하는 방식은 유사해야 한다”, “국가, 사회, 회사 등 사회적 조직의 근본적인 형태는 가족과 유사해야 한다”)과 조직의 리더에게 부모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는 성향(Leaders as parental figures; “재난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숨졌을 때, 국가의 지도자는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껴야 한다”, “국가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국민을 돌봐야 한다”, “나는 아버지

와 같은 느낌이 드는 지도자가 가장 좋다”)으로 구분된다.

가족확장성 문항들에 대해 참여자들은 7점 척도 상에서 높은 점수가 해당 문항에 대한 높은 동의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응답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그렇다). 가족확장성 점수는 6개 문항의 응답 점수들을 합산하여 산출했으며, 이에 따라 가족확장성 점수의 범위는 6-42점에 해당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확장성 척도 전체의 신뢰 계수는 .82였다.

결 과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 간 신뢰 기준들의 비교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들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기준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고자 대응표본 t 검증을 각각 실시하였다. 우선 정치인과 부모 간 신뢰 기준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t(539) = 7.02, p < .001$. 즉, 정치인($M = 6.11, SD = 0.78$)에 대한 신뢰 기준은 부모($M = 5.88, SD = 0.74$)에 대한 신뢰 기준보다 높았다. 그러나 사법부와 부모 간 신뢰 기준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539) = -0.11, p = .916$. 이는 사법부($M = 5.88, SD = 0.82$)에 대한 신뢰 기준은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기준보다 높았다, $t(539) = 8.76, p < .001$.

다음으로 각 대상 간 관계 요인, 대상 요인 측면에서의 신뢰 기준들을 비교하였다(그림 2). 우선 관계 요인의 측면에서 대상들 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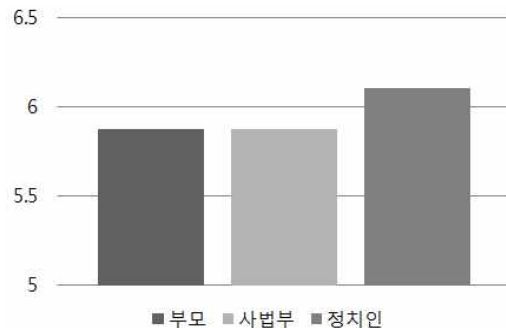


그림 1.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의 신뢰 기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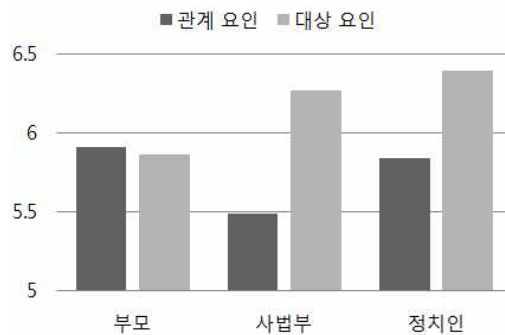


그림 2.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의 신뢰 기준 내 하위 요인들 간 비교

신뢰 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사법부와 부모 간 신뢰 기준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t(539) = -9.35, p < .001$. 즉, 부모($M = 5.91, SD = 0.81$)에 대한 신뢰의 기준이 사법부($M = 5.49, SD = 1.06$)에 대한 신뢰 기준보다 높았다. 정치인과 부모 간 신뢰 기준 차이는 경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539) = -1.68, p = .094$. 즉 정치인($M = 5.84, SD = 0.96$)에 대한 신뢰 기준은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보다 약간 낮았다. 그러나 사법부와 정치인 간 신뢰 기준 차이를 확인하였을 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기준보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이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에 더 가까웠다, $t(539) = -9.43, p < .001$.

대상 요인의 측면에서 사법부와 부모 간 신뢰 기준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며, $t(539) = 11.85, p < .001$, 정치인과 부모 간 신뢰 기준의 차이 역시 유의미하였다, $t(539) = 14.60, p < .001$. 이는 부모($M = 5.85, SD = 0.78$)보다 정치인($M = 6.39, SD = 0.75$)과 사법부($M = 6.27, SD = 0.76$)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사법부와 정치인 간 대상 요인 측면에서의 신뢰 기준 차이 역시 유의미하였다, $t(539) = -4.49, p < .001$.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 각각에 대한 신뢰 기준과 신뢰 수준 간의 관계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 각각에 대한 신뢰 기준과 각 대상에 대한 실제 신뢰 수준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각

대상에 대한 신뢰 기준과 신뢰 수준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참고). 우선 부모에 대한 전체 신뢰 기준과 실제 부모에 대한 신뢰 수준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의 관계 요인 측면 및 대상 요인 측면 또한 부모에 대한 신뢰 수준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 기준과 실제 신뢰 수준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신뢰 기준은 물론, 관계 요인 측면에서의 신뢰 기준 및 대상 요인 측면에서의 신뢰 기준 모두 사법부에 대한 실제 신뢰 수준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전반적으로 사법부에 대해 신뢰를 갖기 위해 충족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기준이 높아질수록, 실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1.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과 신뢰 수준 간의 상관관계

	$M(SD)$	1	2	3	4
1. 부모-신뢰 기준(관계 요인)	5.91(0.81)	-			
2. 부모-신뢰 기준(대상 요인)	5.86(0.78)	.71***	-		
3. 부모-신뢰 기준(전체)	5.88(0.74)	.93***	.92***	-	
4. 부모-신뢰 수준	6.07(1.05)	.31***	.23***	.29***	-
1. 사법부-신뢰 기준(관계 요인)	5.49(1.06)	-			
2. 사법부-신뢰 기준(대상 요인)	6.27(0.76)	.62***	-		
3. 사법부-신뢰 기준(전체)	5.88(0.82)	.93***	.86***	-	
4. 사법부-신뢰 수준	3.27(1.40)	-.15***	-.18***	-.18***	-
1. 정치인-신뢰 기준(관계 요인)	5.84(0.96)	-			
2. 정치인-신뢰 기준(대상 요인)	6.39(0.75)	.67***	-		
3. 정치인-신뢰 기준(전체)	6.11(0.78)	.94***	.89***	-	
4. 정치인-신뢰 수준	2.09(1.15)	-.12**	-.17***	-.15***	-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마지막으로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과 이들 집단에 대한 실제 신뢰 수준 간에도 부적 상관이 발견되었다. 사법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 신뢰 기준, 관계 요인 측면 및 대상 요인 측면에서의 신뢰 기준 모두 정치인에 대해 갖는 신뢰 정도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부모 대비)과 신뢰 수준 간의 관계

부모에 대한 신뢰의 기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법부와 정치인에게 더 높은 신뢰 기준을 요구할 때, 사법부와 정치인에 대한 실제 신뢰 수준이 더 낮은지를 확인하고자 우선 사법부-부모, 정치인-부모 간 신뢰 기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변수들을 각각 계산하였다.

우선 사법부에 대한 신뢰 기준을 묻는 문항과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을 묻는 문항 간 차이 값들을 각각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대상에 대한 신뢰 기준 문항 번호에 대응하는 것들끼리 값을 빼서 총 12개 문항 각각에 대한 차이 사법부-부모 신뢰 기준 차이 값들을 구하였다. 가령 사법부에 대한 신뢰 기준을 묻는 1번 문항(“사법부는 국민에 대해 매우 잘 알아야 한다.”)에서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을 묻는 1번 문항(“부모는 자녀에 대해 매우 잘 알아야 한다.”) 값을 빼 차이 값을 산출했으며 나머지 문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산출된 12개의 차이 값들 가운데 1번 문항부터 6번 문항에 이르는 값들의 평균을 구해 관계 요인의 측면에서의 ‘사법부-상대적 신뢰 기준(관계 요인; Cronbach's alpha = .82)’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7번 문항부터 12번

문항에 이르는 값들의 평균을 구해, 대상 요인 측면에서의 ‘사법부-상대적 신뢰 기준(대상 요인; Cronbach's alpha = .77)’ 변수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1번부터 12번 문항에 이르는 모든 차이 값들의 평균을 구해 ‘사법부-상대적 신뢰 기준(전체; Cronbach's alpha = .84)’ 변수를 추가로 생성하였다. 한편 정치인-부모 간 신뢰 기준 차이 관련 변수들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생성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인-상대적 신뢰 기준(관계 요인; Cronbach's alpha = .78)’, ‘정치인-상대적 신뢰 기준(대상 요인; Cronbach's alpha = .81)’, ‘정치인-상대적 신뢰 기준 차이(전체; Cronbach's alpha = .85)’ 변수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된 변수들의 경우, 각각 평균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대상(사법부-부모, 정치인-부모) 간 신뢰 기준 차이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의 방향은 (사법부,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이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보다 더 높음을, 부(-)의 방향은 (사법부,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이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보다 더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부모 대비)과 각 대상에 대한 실제 신뢰 수준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사법부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과 실제의 신뢰 수준 간 상관분석 결과, 신뢰 기준의 관계 요인 측면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 기준이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에 비해) 높은 사람들은 사법부를 더 불신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신뢰 기준의 대상 요인 측면과 전체 신뢰 기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즉, 결과적으로 부모보다 사법부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신뢰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사법

표 2.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부모 대비)과 신뢰 수준 간의 상관 관계

	<i>M(SD)</i>	1	2	3	4
1. 사법부-상대적 신뢰 기준(관계 요인)	-0.42(1.04)	-			
2. 사법부-상대적 신뢰 기준(대상 요인)	0.41(0.81)	.43***	-		
3. 사법부-상대적 신뢰 기준(전체)	0.00(0.79)	.89***	.80***	-	
4. 사법부-신뢰 수준	3.27(1.40)	-.16***	-.15***	-.18***	-
1. 정치인-상대적 신뢰 기준(관계 요인)	-0.07(0.92)	-			
2. 정치인-상대적 신뢰 기준(대상 요인)	0.53(0.85)	.52***	-		
3. 정치인-상대적 신뢰 기준(전체)	0.23(0.77)	.88***	.86***	-	
4. 정치인-신뢰 수준	2.09(1.15)	-.05	-.11**	-.09*	-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부를 더 불신하였다.

한편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과 이들에 대한 실제 신뢰 수준 간 상관분석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신뢰 기준의 관계 요인 측면은 실제 정치인에 대한 신뢰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신뢰 기준의 대상 요인 측면 및 전체 신뢰 기준에 걸쳐 부모에 비해 정치인에 대한 보다

높은 신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정치인을 더 불신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수준(부모 대비)과 가족확장성 간의 관계

다음으로 가족확장성(사회적 체계를 가족으로 이해하는 성향)이 신뢰 기준과 어떤 관련

표 3.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부모 대비)과 가족확장성 간의 상관관계

	<i>M(SD)</i>	1	2	3	4
1. 사법부-상대적 신뢰 기준(관계 요인)	-0.42(1.04)	-			
2. 사법부-상대적 신뢰 기준(대상 요인)	0.41(0.81)	.43***	-		
3. 사법부-상대적 신뢰 기준(전체)	0.00(0.79)	.89***	.80***	-	
4. 가족확장성	4.76(1.06)	.17***	.00	.11**	-
1. 정치인-상대적 신뢰 기준(관계 요인)	-0.07(0.92)	-			
2. 정치인-상대적 신뢰 기준(대상 요인)	0.53(0.85)	.52***	-		
3. 정치인-상대적 신뢰 기준(전체)	0.23(0.77)	.88***	.86***	-	
4. 가족확장성	4.76(1.06)	.16***	.05	.12**	-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들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고). 우선 사법부에 대한 부모 대비 상대적 신뢰 기준(관계 요인)의 경우, 가족확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부모보다 사법부에 대해, 관계 요인 측면에서 더 높은 신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확장성과 대상 요인 측면에서의 사법부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 간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확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전체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 수준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관계 요인 측면에서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수준은 높았다. 가족확장성과 대상 요인 측면에서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 간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확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전반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수준(부모 대비)과 가족확장성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고). 분석 결과, 사법부에 대한 상대적 신뢰 수준(부모 대비)과 가족확장성 간 부적 상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확장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 비해 사법부를 더 신뢰하는 정도는 낮았다.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수준(부모 대비)과 가족확장성 간에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발견되었다.

연구 2

연구 1의 결과는 한국사회에 대한 저신뢰 인식이 높은 신뢰 기준에 귀인될 수 있고 그 관계에서 가족확장성이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상관분석에 근거하고 있기에 인과관계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가족확장성이 실제로 정부에 대한 신뢰의 기준을 높이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사법부와 정치인만큼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정부를 신뢰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Government at a Glance 2015).

표 4.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수준(부모 대비)과 가족확장성 간의 상관관계

	<i>M(SD)</i>	1	2	3
1. 사법부-상대적 신뢰 수준(부모 대비)	-2.80(1.68)	-		
2. 정치인-상대적 신뢰 수준(부모 대비)	-4.00(1.58)	.76***	-	
3. 가족확장성	4.78(1.06)	-.14**	-.17***	-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주. 사법부-상대적 신뢰 수준(부모 대비) = (사법부에 대한 실제 신뢰 수준) - (부모에 대한 실제 신뢰 수준), 정치인-상대적 신뢰 수준(부모 대비) = (정치인에 대한 실제 신뢰 수준) - (부모에 대한 실제 신뢰 수준)

연구참여자

전국의 성인 남녀 540명(남성 = 270명, 여성 = 270명)을 대상으로 조사전문회사를 통해 온라인 조사형태로 실험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때의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1에서의 참여자들과는 상이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의 나이 평균은 38.14세($SD = 9.96$)였으며, 범위는 20세에서 59세였다.

연구 절차

연구 2에서는 가족확장성 수준에 따라 정부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부모 대비)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우선 참여자들은 연구 1에서 활용된 바 있는,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의 정도를 묻는 문항들에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실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가족확장성 수준의 조작을 위해 무선적으로 두 개의 집단에 할당되었다. 우선 가족확장성이 높은 조건의 경우, ‘정부와 가족은 유사하다’라는 논조의 글을 읽은 후 이를 뒷받침하는 글을 직접 작성해보도록 지시를 받았다. 가족확장성이 낮은 조건의 경우에는 ‘정부와 가족은 다르다’라는 논조의 글을 읽은 후 타 조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논조를 뒷받침하는 글을 직접 작성해보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모든 참여자들은 정부와 가족이 얼마나 유사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조작점점 문항에 답변하였고, 이어 정부에 대한 신뢰 기준을 묻는 문항들에 답변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 기준 문항들은 연구 1에서 활용된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 문항들과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적사항에 대한 문항들이 제시되었고, 실험

이 모두 끝난 이후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받았다.

연구 도구

부모 및 정부에 대한 신뢰의 기준

부모, 정부 각각에 대한 신뢰 기준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연구 1에서 활용되었던 신뢰 기준을 묻는 12문항을 활용하였다. 우선 부모에 대한 관계 요인 측면에서의 신뢰 기준을 묻는 6문항, 대상 요인 측면에서의 신뢰 기준에 해당하는 6문항을 통해 관계 요인(Cronbach's $\alpha = .88$) 및 대상 요인 측면(Cronbach's $\alpha = .88$)에서의 신뢰 기준 점수를 각각 측정하였다. 전체 신뢰 기준에 대한 문항들의 측정은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리커트 7점 척도가 활용되었다(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중요하다). 전체 12문항에 대한 신뢰 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계 요인(6문항)과 대상 요인(6문항) 측면을 반영한, 신뢰 기준에 대한 문항들이 활용되었다. 참여자들은 리커트 7점 척도(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중요하다) 상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기준 정도를 평가하였으며,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 기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관계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신뢰 계수는 .88이었으며, 대상 요인의 경우에는 .93의 신뢰 계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 기준 전체 문항들의 신뢰 계수는 .93에 해당하였다.

가족확장성 활성화 처치

참여자들은 가족확장성 활성화 조건과 가족 확장성 비활성화 조건에 무선적으로 배정되었다. 우선 가족확장성이 활성화 조건의 경우, 정부와 가족 간 유사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짧은 글을 읽은 후,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글을 1-2문단 정도 분량으로 작성해볼 것을 지시받았다.

현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 되는 삼권 분립의 원칙은 국가 권력의 집중과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고안된 것으로, 입법·사법·행정에 걸친 세 개의 독립적인 기구에 국가 권력을 분담시켜 권력 흐름에 대한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 요체이다. 이러한 삼권 분립의 원칙이 확립된 이후, 학계에서는 국가 권력의 일부를 담당하는 각 주체들(입법·사법·행정)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전개해 왔다. ... (중략) ... 한편 국가 단위 내에서 '행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족' 간의 관계성을 논함에 있어, 일부 학자들은 정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족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정부의 형태, 기능, 변화 등 여러 관련 속성들은 가족 단위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정부 조직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가족 제도에 대한 이해와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확장성 비활성화 집단의 경우에는 정부와 가족이 서로 다르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읽고,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글을 1-2문단

정도로 작성할 것을 지시받았다.

현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 되는 삼권 분립의 원칙은 국가 권력의 집중과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고안된 것으로, 입법·사법·행정에 걸친 세 개의 독립적인 기구에 국가 권력을 분담시켜 권력 흐름에 대한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 요체이다. 이러한 삼권 분립의 원칙이 확립된 이후, 학계에서는 국가 권력의 일부를 담당하는 각 주체들(입법·사법·행정)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전개해 왔다. ... (중략) ... 한편 국가 단위 내에서 '행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족' 간의 관계성을 논함에 있어, 일부 학자들은 정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족과 다르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정부의 형태, 기능, 변화 등 여러 관련 속성들은 가족 단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 조직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가족 제도에 대한 이해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에 따른 조작 절차가 끝난 후, 모든 참여자들은 정부와 가족 간 유사성에 관한 조작 점점 문항("정부와 가족은 얼마나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리커트 7점 척도(1 = 전혀 유사하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유사하다) 상에서 답변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 과

조작 점검

두 집단의 가족확장성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고자, 조작 점검 문항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독립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확장성 수준이 높게 유도된 집단($M = 4.14$, $SD = 1.78$)이, 가족확장성 수준이 낮게 유도된 집단($M = 2.87$, $SD = 1.56$)에 비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t(538) = 8.87$, $p < .001$.

가족확장성에 따른 정부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부모 대비)의 차이 비교

분석에 앞서 부모 대비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을 나타내는 변수를 계산하였는데, 이는 연구 1에서의 사법부,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 변수에 대한 계산 과정과 동일하였다. 결과적으로 관계 요인 측면에서 ‘정부-상대적 신뢰 기준(관계 요인; Cronbach’s $\alpha = .81$)’, 대상 요인 측면에서 ‘정부-상대적 신뢰 기준(대상 요인; Cronbach’s $\alpha = .85$)’, ‘정부-상대적 신뢰 기준(전체; Cronbach’s $\alpha = .86$)’ 변수들을 생성하였다.

가족확장성에 따라 정부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부모 대비)의 차이값 양상이 어떻게

상이한지를 확인하고자 독립 t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의 관계 요인 측면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즉, 가족확장성이 낮게 유도된 조건의 참여자들에 비해, 가족확장성이 높게 유도된 조건의 참여자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 기준이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의 대상 요인 측면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신뢰 기준과 관련된 전체 12문항에 대해, 집단 간 정부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에 근접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 기준을 각각 확인하고, 대상들에 대한 신뢰 기준들의 차이가 실제 신뢰 수준 및 가족확장성 수준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추가적으로 가족확장성의 역할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사법부,

표 5. 가족확장성에 따른 정부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부모 대비)의 차이 비교

종속 변인 문항	가족확장성 조건		t	p
	높음 ($n = 265$)	낮음 ($n = 275$)		
정부-상대적 신뢰 기준(관계 요인)	-0.35(0.94)	-0.58(1.00)	2.82**	.005
정부-상대적 신뢰 기준(대상 요인)	0.36(0.84)	0.35(0.92)	0.13	.899
정부-상대적 신뢰 기준(전체)	0.01(0.77)	-0.11(0.83)	1.78	.076

** $p \leq .01$.

정치인, 정부 등에 대해 자신의 부모와 유사하거나 혹은 더 높은 수준의 신뢰 기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은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보다 높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 기준과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신뢰 기준 내 관계 요인에 있어서는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보다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이 더 낮았지만 신뢰 기준 내 대상 요인에 있어서는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보다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이 더 높았다. 둘째, 사법부,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이 높을수록 각 대상에 대한 실제 신뢰 수준은 낮았다. 특히 부모에 비해 사법부, 정치인에 대해 더 높은 신뢰의 기준을 갖고 있을수록 이들 대상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사회 조직들을 하나의 거대한 가족 체계로 이해하려는 성향인 '가족확장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보다는 사법부와 정치인에 대해 더 높은 신뢰 기준을 나타냈다. 그리고 가족확장성 수준이 높을수록 사법부,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수준(부모 대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를 통해 가족확장성의 수준을 조작한 후, 집단 간 부모-정부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한 결과, 가족확장성이 높은 집단은 가족확장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모-정부 간 상대적 신뢰 기준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해 부모에 준하거나, 심지어 부모보다 더 높은 신뢰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들의 신뢰 인식에 관한 기존 문화심리학적 연

구들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가족이나 친구 등 친밀한 관계를 토대로 신뢰감 및 신뢰의 기준을 형성하며, 이렇게 획득된 신뢰 인식은 사회 제도나 정부, 기업, 언론, 사법부 등 비교적 거시적인 사회 조직들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박영신, 김의철, 2005; 최상진 등, 2003; 한성열, 2005). 그리고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해 더 높은 신뢰 기준을 가지고 있을수록 실제 각 대상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사회 내 '저신뢰' 현상에서 여타 국가의 국민들보다 한국인들이 사법부와 정치인에 대해 더 높게 가지고 있는 신뢰 기준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OECD 등에서 보고된 국가 간 신뢰 인식 상의 비교 결과들을 토대로 성급하게 한국 사회를 '저신뢰 사회'로 규정짓기는 어려운 일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각 국가별 정부, 기업, 사법부, 정치인 등 주체들에 대한 신뢰 인식 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이거나, 혹은 고유한 신뢰의 기준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법부,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부모 대비)은 가족확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한국인들은 사법부, 정치인에 대해 부모에 준하거나, 심지어 부모보다 더 높은 신뢰 기준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족확장성을 높게 가지고 있던 이들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 기준이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에 보다 가까워졌다. 결과적으로 이는 집단주의적 역사, 가족을 중시하던 유교적 가치

의 지속 등에 따라 한국인들이 지니게 된 가족확장성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성향이 한국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저신뢰 현상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반 세기 동안, 한국 사회는 ‘한강의 기적’으로 집약되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합리와 이성, 개인주의 등 서구화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으며 이들 새로운 가치관들은 한국인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활 양식 및 가치관들의 축소를 야기하였다. 도시화 현상과 맞물려 대가족 중심의 전통적 가족 구성은 점차 핵가족의 형태로 재편되어왔으며, 1인 가구나 고독사가 증가하는 지금의 현실은 한국 사회 내 진행 중인 ‘가족 해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들의 신뢰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한국인들의 신뢰 인식의 원류인 ‘가족’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인들이 사법부, 정치인, 정부 등에 대해 가족에 대한 신뢰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현대 사회의 한국인들이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유교적 관습 가운데 하나인 ‘가족확장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본 연구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신뢰한다’라는 판단의 기저에 관여하는 기준 및 요인들을 다차원적으로 탐색하여, 이를 신뢰 기준 측정의 도구로 활용하였다는 점 역시 본 연구가 갖는 또 하나의 의의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 내 저신뢰 현상에 가족확장성이 관련되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 주요 체계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들에게 중요한 함의와 시사점을 제

시해 줄 수 있다. 즉, 정부, 사법부, 정치인 등 국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는지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국민들에게 헌신하고 친근하게 다가서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사법부, 정치인, 정부 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신뢰 기준 측정의 대상으로 부모 외 사법부, 정치인, 정부를 선정하였는데, 단지 이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만을 통해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 인식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 언론, 교육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 조직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신뢰 인식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등 타 동아시아 국가들이나 미국 등 서구 국가의 국민들을 포함시켜 비교문화 연구의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한국사회에서 가족확장성이라는 문화심리적 요인이 신뢰 기준과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했지만, 그것이 한국 사회에 대한 저신뢰 인식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비교문화심리학적 검증은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별로 부모 및 사회 주요 조직들에 대한 신뢰 기준을 측정하고, 이들 기준이 실제 신뢰 수준 및 가족확장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인

들의 신뢰 인식 기저에 독특하게 존재하는 문화적 특성의 실체를 보다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언, 이영석 (2000). 한국기업조직에서 부하가 상사에 대해 갖는 신뢰와 불신의 기반.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3), 99-120.
- 김재신 (2011). 일반화된 타자, 정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16.
- 박영신, 김의철 (2005).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21-55.
- 박진영, 최혜원, 서은국 (2012). 물질주의와 인간관계 경시의 심리적 원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23-36.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14). 한국 종합사회조사. http://kgss.skku.edu/?page_id=39에서 2016. 11. 27 자료 얻음.
- 손정락 (2005). 신뢰와 건강.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특집호, 85-95.
- 심경섭, 이누미야 요시유키, 윤상연, 서신화, 장양, 한성열 (2012). 유교가치관 척도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465-491.
- 유길한 (2008). 우리나라 학교교육조직의 상호 의존성, 갈등, 신뢰, 교육의 질 구조에 대한 모델 개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6(2), 105-132.
-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3).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정치효능감, 신뢰의식과 정치참여 행동 차이분석.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69-170.
- 이나경, 이영애 (2005). 방폐장 입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17(4), 461-475.
- 이상미, 김의철, 박영신 (2006). 청소년의 부모, 교사, 친구에 대한 신뢰와 불신: 토착심리학적 접근. 아동교육, 15(4), 297-312.
- 이장주, 최상진 (2003). 부자유친성정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87-104.
- 이전희, 문형구, 김경민 (2011). 군 조직에서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4), 739-758.
- 정태연 (2010).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대한 역사·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3), 53-76.
- 조궁호 (2007). 동아시아 집단주의와 유학 사상: 그 관련성의 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21-54.
- 조기숙, 박혜윤 (2004). 신뢰의 측정: 실험과 설문조사의 차이. 한국정치학회보, 38(2), 95-116.
- 최상진, 김의철, 김기범 (2003). 한국사회에서의 대인관계속의 신뢰와 불신의 기반으로 서의 마음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2), 1-17.
- 최순화 (2013). 브랜드 신뢰 구성요인과 충성 행동 유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4(1), 47-67.
- 최영재 (2006). 언론의 편향성과 신뢰 분열: 황우석 논문 조작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 신뢰연구, 16(1), 21-47.
- 탁진국, 손동성 (2012). 서번트 리더십이 종업원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2), 373-395.
- 한덕웅 (2001). 한국의 유교문화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비판적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449-479.
- 한성열 (2005). 한국사회의 신뢰와 불신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과제 및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163-174.
- Barber, B.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 Press.
- Benavides, P., Lee C. R., Kim, S. H., Adeclas, J., & Hur, T. K. (2016). Korean Family Expansionism: A Cross-Cultural Comparison. *Unpublished manuscript*.
- Brown, L. D., & Ashman, D. (1996).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and intersectoral problem solving: African and Asian cases. *World Development*, 24(9), 1467-1479.
- Chanley, V. A. (2002). Trust in government in the aftermath of 9/11: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Political Psychology*, 23(3), 469-483.
- Cook, K. S., Yamagishi, T., Cheshire, C., Cooper, R., Matsuda, M., & Mashima, R. (2005). Trust building via risk taking: A cross-societal experi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8(2), 121-142.
- Heine, S. J., Lehman, D. R., Peng, K., & Greenholtz, J. (2002). What's wrong with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subjective Likert scales? The reference-group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903-918.
- Hetherington, M. J. (1999). The effect of political trust on the presidential vote, 1968-9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2), 311-326.
-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2010-2014). *World Values Surveys*. <http://www.worldvaluessurvey.org>에서 2016. 11. 27 자료 얻음.
- Kim, U. (2003). Science, religion, philosophy, and culture: Psychological analysis of western, islamic, and east asian world views. Kim, U., & Aasen, H. S. (2003). *Democracy, human rights, and Islam in modern Iran: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Bergen: Fagbokforlaget.
- Kramer, R. M. (1999). Trust and distrust in organizations: Emerging perspectives, enduring ques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1), 569-598.
- Kuwabara, K., Willer, R., Macy, M. W., Mashima, R., Terai, S., & Yamagishi, T. (2007). Culture, identity, and structure in social exchange: A web-based trust experi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0(4), 461-479.
- Lewis, J. D., & Weigert, A. (1985). Trust as a social reality. *Social Forces*, 63(4), 967-985.
-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2011*.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_9789264121164-en에서 2016. 11. 23 자료 얻음.
- OECD (2013). *Government at a Glance 2013*. http://www.oecd-ilibrary.org/governance/government-at-a-glance-2015_gov_glance-2015-en에서 2016. 11. 25 자료 얻음.
- OECD (2015). *Government at a Glance 2015*. [http://www.oecd-ilibrary.org/governm](http://www.oecd-ilibrary.org/governance/governm)

- ent-at-a-glance-2015_gov_glance-2015-en에서
2016. 11. 25 자료 얻음.
- Luhmann, N. (1988). Familiarity, confidence, trust: problems and alternatives. In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ed. D Gambetta, p. 94-108. Cambridge, MA: Oxford Univ. Press.
- Peng, K., Nisbett, R. E., & Wong, N. Y. (1997). Validity problems comparing values across cultures and possible solutions. *Psychological Methods*, 2(4), 329-344.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The American Prospect*, 4(13), 35-42.
- Robinson, S. L. (1996). Trust and breach of the psychological contrac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1(4), 574-599.
- Rotter, J. B. (1980). Interpersonal trust, trustworthiness, and gullibility. *American Psychologist*, 35(1), 1-7.
- Steidel, A. G. L., & Contreras, J. M. (2003). A new familism scale for use with Latino population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5(3), 312-330.
- Whitener, E. M., Brodt, S. E., Korsgaard, M. A., & Werner, J. M. (1998). Managers as initiators of trust: An exchange relationship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anagerial trustworthy behavi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513-530.
- Yamagishi, T., & Yamagishi, M. (1994). Trust and commi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tivation and Emotion*, 18(2), 129-166.
- Yuki, M., Maddux, W. W., Brewer, M. B., & Takemura, K. (2005).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relationship-and group-based trus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1), 48-62.

논문 투고일 : 2016. 12. 15

1 차 심사일 : 2016. 12. 20

게재 확정일 : 2017. 02. 25

Can High Trust Expectation Cause Low Trust? The Roles of Trust Criteria and Family Expansionism

Yong Hoe Heo

Sun W. Park

Taekyun Hur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investigated the psychological nature of low levels of trust in Korean society and the role of family expansionism, a cultural psychological factor, in this phenomenon.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possibility that Koreans' distrust toward social system is, at least partially, due to high standards for trust, which might be closely related to Koreans' cultural characteristic of family expansionism. In Study 1, the relations between levels of family expansionism, trust standards, and actual levels of trust for parents, judiciary, and politicians were examined among 540 Korean adults. In Study 2, we manipulated levels of family expansionism to examine its effect on trust standards. Results showed that trust standards were higher for politicians than parents. Participants' trust standards for politics were unrealistically high, especially on the responsibility factor. Actual levels of trust for judiciary and politicians were low when the trust standards for these targets relative to trust standards for parents were high. Moreover, the trust standards and levels of trust for judiciary and politicians (relative to those for parents)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levels of family expansionism. In other words, higher levels of family expansionism were linked to higher trust standards and levels of distrust for judiciary and politicians. In addition, Study 2 results showed that trust standards became high when family expansionism was induced. Unlike previous studies which focused on causes of low levels of trust while assuming that Korean society itself is a low trust society, the present research investigated the underlying mechanism behind the seemingly low trust in Korean society.

Key words : trust, distrust society, family expansionism, trust standard